

건축공간연구원

연구과제 소개

구분	과제명	과제책임
기본 과제	2023년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김상호
	대규모 언어모델을 활용한 건축법령 해석 지원 시스템 고도화 방안 연구	조상규
	건축안전 모니터링 실효성 강화를 위한 건축법령 개정방안	이주경
	지역 Space-MBTI'를 활용한 인구감소지역 특성 진단 연구	박성남
	영구임대주택 거주 고령자의 지역기반 생활지원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방안	윤진희
수시 과제	건축서비스산업 역량 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오민정
	한옥 등 건축자산 밀집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실태 분석	방보람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의 쟁점 진단 및 개선방안	김준래
	소록도 문화유산 지정 방안 연구	박일향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를 위한 지역맞춤형 운영모델 연구	김민지
	보행자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남궁지희

기본과제

① 2023년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2014년 건축서비스산업을 지식기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되고, 2022년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가 「통계법」에 근거한 국가통계로 승인되면서 건축서비스산업 분야 최초의 통계작성이 정례화되었다. 건축서비스산업 분야에서도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사회구조의 변화와 저성장 경제의 지속, 디지털 기반 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 등의 패러다임 변화가 가시화되면서 디지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디지털 데이터의 통계를 활용한 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특히 건축서비스분야 국제시장을 선도하는 미국의 경우에는 산업현황 분석과 미래예측을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이러한 통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우리 연구원은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통계청으로부터 통계작성 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관련 업무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중이다.

이 연구는 2024년에 시행하는 제3차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모집단 현행화와 국가통계 품질개선을 위한 조사항목의 보완 및 재설정, 전문 조사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실태조사 시행 및 통계작성, 결과 공표 등을 위한 일련의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전년도에 이루어진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활용도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통계품질 수준 제고와 품질개선 방안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건전한 육성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고, 건설산업 등 연관 산업과의 데이터 교류를 통한 산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김상호

② 대규모 언어모델을 활용한 건축법령 해석 지원 시스템 고도화 방안 연구

이 연구는 대규모 언어모델 기술을 활용하여 건축법령 해석 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3년도에 수행된 선행 연구에서는 건축법령 해석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 시스템을 개발하고, 대규모 언어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 후속 작업으로 기존 시스템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고, 추가적인 정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고자 한다.

특히 답변 생성을 위한 근거 법령 추출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높이고, 연혁 법령 해석 및 지자체 조례 추적 알고리즘 등을 추가하여 기존 시스템의 정답률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와 건축 안전 관련 질의응답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념 실증을 통해 추가적인 정책 수요에도 대응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자동화된 성능 평가 프로세스 활용, 전용 클라우드 시스템 리소스 확보를 통한 데이터 보안 강화, 사용자 및 전문가 피드백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로 개발될 '건축법령 해석 지원 시스템'은 건축 관련 규제 적용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빈번한 민원 발생으로 인한 행정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다른 규제 법령 적용 시스템 개발에도 중요한 레퍼런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상규

③ 건축안전 모니터링 실효성 강화를 위한 건축법령 개정방안

건축안전 모니터링은 「건축법」에 따라 설계 및 시공현장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구조 및 화재 기준의 적합성을 조사하는 제도다. 최근 건축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모니터링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강제력 및 절차적 근거 부족으로 인해 부적합 대상에 대한 사후 조치가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이번 연구를 통해 건축안전 모니터링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모니터링 운영 결과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의 당위성을 재확인하며, 국내외 유사 제도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친다. 최종적으로는 「건축법」 개정안을 제안함으로써, 건축안전 모니터링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 연구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제도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건축안전 모니터링의 합리적·효율적 운영 및 국민과 기업의 건축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정책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주경

④ '지역 Space-MBTI'를 활용한 인구감소지역 특성 진단 연구

지방소멸은 지방의 위기다. 2022년 이후 10년간 매년 약 1조 원씩의 대응기금이 지역의 해법 마련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2022~2026)'에는 건축공간연구원에서 2023년 개발한 '지역 현안 체크리스트'와 '지역 Space-MBTI'가 포함되어 있다.

이 연구는 '지역 Space-MBTI' 진단 체계를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적용하여 그 진단 결과에 따른 지역 특성 유형화 분석을 실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72개 설문 문항이 재구성되어 일반주민과 공무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 Space-MBTI 진단 분석을 위해 각 지역별의 리포트를 작성하고자 한다. 이 리포트에는 Space-MBTI 진단 결과, 두드러지는 현

재 지역 특성, 응답 그룹 간 차이 비교 등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 Space-MBTI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진단결과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시사점을 토의하고자 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의 시사점, 사업 방향에 대한 시사점, 정책 추진의 시사점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맞춤형으로 진단함으로써 지역이 지방소멸을 대응함에 있어 전략적 접근, 차별화 접근을 강화하기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지역 Space-MBTI가 그 명명한 가치대로 지역의 기저 유형을 알려주는 지표(Municipal Base Type Indicator)로서 지방소멸의 위기를 역전시킬 전환점의 디딤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을 효과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인 공론장(Institutional Arena)'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박성남

⑤ 영구임대주택 거주 고령자의 지역기반 생활지원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방안

노인 천만 시대, 전체 인구 중 고령자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 진입(2025년)을 앞두고 거주하던 지역 중심(Ageing in Place: AIP)의 고령자 주거 지원에 관한 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고령자의 주거 지원은 단순히 주택 범위를 넘어 노인이 거주하던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식사·여가·건강·돌봄 등 일상적인 생활지원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는 익숙한 곳에서 나이 들고 싶은 고령자의 주거수요뿐만 아니라 노인의 독립적인 거주 기간을 연장하여 입원·입소로 인한 사회적 노인부양비용 관리의 효과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지역기반 생활지원 서비스 공급에 있어 수요자인 고령자의 이동 가능범위 및 건강 등 개인 특성에 대한 고려는 아직 제한적이다.

특히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경제·신체·물리적 제약으로 자신이 살던 공간에서 비자발적으로

고립(Stuck in Place: SIP)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건설된 영구임대주택의 86.2%는 25년 이상 경과한 노후 주택이며, 주호는 협소하고, 그곳의 거주자는 고령화되고 있다. 특히 건강 및 장애의 정도,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이동 가능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데, 영구임대주택 고령자의 경우 규칙적인 경제활동이 적고, 장애인 비율이 높아 일상생활 범위가 제한되는 특성을 가진다.

이에 이 연구는 저소득 고령자가 밀집되어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거주 고령자들의 건강 및 가구 특성 유형별 이동범위와 생활지원 서비스의 수요를 분석하여 생활지원의 공간적 접근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영구임대주택 거주 고령자들의 독립적 생활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공간적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윤진희

수시과제

① 건축서비스산업 역량 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일반적으로 산업 활동의 여건, 성과의 현재 수준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하여 산업 역량을 분석하곤 한다. 특히, 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지속적인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역량에 대한 진단이 필요해지고 있다. 산업 역량 분석을 통해 산업의 현안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고 앞으로의 산업 발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이는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실행의 근거로 활용되고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산업 분야마다 해당 산업의 '역량 지표'를 개발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역량을 분석하는 추세이다.

한편, 건축서비스산업 분야는 산업 구조 및 활동 여건과 관련된 여러 현안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

지만 이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은 부족한 상황이다. 2022년부터 진행 중인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는 현황을 파악하는 데 그치는 수준이며 미래 건축서비스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쟁력, 성장 가능성 등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역량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역량 진단을 위한 지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으며, 산업 역량 분석 방법 및 지표 개발 방법론을 고찰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역량 지표 초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역량 지표가 고도화되어 건축서비스산업 역량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진단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오민정

② 한옥 등 건축자산 밀집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실태 분석

국가유산체제 도입과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역사문화유산을 보전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언론, SNS 등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국가·지자체에서도 관광자원이자 미래자산으로 바라보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도 기반이 마련되고 관련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물리적 특례 및 규제 완화를 적용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이 공간적 보전·활용 수단으로 주목되고 있다. 이렇게 역사문화유산 보전·활용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특정 규제로 지역주민이 어려움을 겪거나 상업화의 가속화로 고유한 지역정체성을 상실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현황진단을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역사문화유산 보전·활용을 위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현황진단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한옥 등 건축자산을 포함하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지구단위계획의 실태파악을 통해 역사문화유산의 보전·활용·관리 측면에서 수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쟁점 및 이슈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도출된 이슈 및 쟁점을 바탕으로 향후 효과적인 역사문화유산 보전·활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방보람

③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의 쟁점 진단 및 개선방안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공공시설물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를 2016년부터 시행 중이다.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복지시설 중 건립비용이 일정 규모 이상인 시설에 대하여 시설 개요(건립일, 총건립비용 등), 운영관리 현황(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변동 등), 운영비용 및 수입(인건비, 유지관리비, 입장료, 임대료 등) 관련 정보를 자치단체 홈페이지(재정공시)와 지방재정365(통합공시)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다.

다만, 연도별 공개되는 자료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확인된다. 개별 공공시설의 데이터가 누락되거나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시계열 자료로 변환 시 데이터 오류나 오기입이 의심되는 공공시설도 다수 확인된다. 전년도에 공개되었던 공공시설이 멸실되지 않았음에도 다음 해에 제외되거나 특정 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이 모두 누락되는 회계연도도 확인된다. 2021년부터 공개대상 기준이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변경 전 기준으로 자치단체 홈페이지나 지방재정365에서 안내되는 것은 현행 공개제도의 신뢰성 결여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처럼 다양한 문제점이 확인됨에도 매년 재정공시나 통합공시를 통해 공개가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공공시설의 예산 낭비 방지 및 효율적 관리 도모라는 제도 취지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의 쟁점 사항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개데이터의 문제점을 진단한 후 자치단체 운영현황 실태분석을 통해서 데이터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공공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이용률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준래

④ 소록도 문화유산 지정 방안 연구

소록도는 섬 전체가 병원으로서 한센병 환자를 격리 수용하기 위해 1916년에 설립된 소록도자혜의원을 모태로 하며, 현재까지 국내 유일한 국립 한센병 전문치료 기관으로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다. 우리는 소록도에서 20세기의 한센병에 대한 오해, 그 오해에서 촉발된 인권 유린과 생존권 투쟁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으며, 개별 건축물이 가지는 건축적 가치 이상의 장소적·역사적 가치를 배울 수 있다.

이러한 소록도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사적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소유 국유지라는 소유권의 문제, 현재도 환자들 수백 명이 거주하고 있고 환자의 치료·요양이 지속되어야 하는 병원 기능상의 문제, 환자 보호를 위한 공개 제한의 필요와 일반인의 문화유산 향유를 위한 외부공개 필요의 상충하는 문제, 실질적으로 병원이기에 문화유산의 지속적인 관리를 담보하기 어려운 인력·예산 확보의 문제, 한센병 환자의 감소로 인해 향후 병원 기능의 변화를 피해야 하는 기능 전환의 문제 등이 소록도 사적 지정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특히 문화유산의 지정 범위, 관리주체, 명칭을 결정하는 데 있어 관계자 간 의견이 일치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이 연구는 소록도의 문화유산 지정과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 지정범위, 관리주체, 명칭의 대안을 검토하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

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지자체, 국가유산청 등 여러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재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제도 및 사례 조사, 전문가 자문을 통해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행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병원의 운영과 환자의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면서도 소록도가 지니는 역사적 가치가 보존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박일향

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를 위한 지역맞춤형 운영모델 연구

지자체 단위에서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도입한 이후, 센터의 정착을 위해 의무적으로 센터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자체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당초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는 권장사항이었으나, 2021년에는 광역지자체 17곳과 인구 50만 명 이상의 기초지자체 24곳이 센터 의무설치 지자체에 포함되었다. 2023년 7월부터는 건축허가 면적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기초지자체에도 센터 설치의무를 부과하면서, 센터 의무설치 지자체는 종전 41곳에서 140곳으로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센터의 설치기한을 1년으로 고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지자체 140곳 중 미설치 지자체는 55곳에 이르는 실정이다.

지자체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의 예상 업무수요와 현안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필수전문인력을 2명 이상 채용하여 센터를 설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특히 센터 의무설치 지자체로 신규 편입된 지자체의 약 20%가 인구 5만 명 미만의 지자체로, 전문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 지자체의 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센터 조직구성 모델이 필요하며, 특히 센터 내 필수전문인력의 충원 여부에 따라 센터의 업무내용과 범위

등이 달라지므로 이에 따른 센터 운영모델을 단계별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센터 의무설치 지자체 중 센터 미설치 지자체 55곳을 대상으로 현황을 분석하여 유형화하고, 유형별 대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현안 등을 심층분석하여 센터의 조직구성 모델을 제안함으로써 지자체 여건에 적합한 유형별·단계별 센터 운영모델과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국적 확대와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민지

6 보행자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지난 2022년 8월 수립된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022-2026)'에서 '안전하고 걷기 좋은 보행 중심 사회 실현'을 위해, '교통안전 관련 제도, 인프라, 문화 전반을 보행자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였다. 기존 제도에서 보행자에게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는 한편, 보행권의 실질적 보장, 보행약자 및 사각지대 보호, 보행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위한 개정 소요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왔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제도적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보행자길'에 관한 현안을 고찰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에 정의된 '보행자길'은 일반적인 보도뿐 아니라 길 가장자리구역이나 횡단보도, 통학로, 탐방로, 산책로 등에 이르기까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포괄하는 광의적 개념이다. 이를 통해 보도의 유무나 법정 도로 여부, 소관 법령이나 관리주체와 같은 형식적인 기준을 넘어, 다양한 유형의 보행공간을 연속적, 종합적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동법에 따른 법정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개선사업 등의 정책수단이 적용되는 실체적 대상과 범위를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보행자길의 이점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의로 인해 실질적인 관리대상의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우며, 일부 보행공간의 누락과 단절, 관리체계의 편향성과 사각지대, 관리대상과 수단 간의 정합성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보행자길의 개념과 관리체계에 대한 현행 규정과 실태를 통합 점검함으로써, 「보행안전법」을 비롯한 유관 법령에서 보행자길 관련 규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보행자길의 세부유형별 특성과 기초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체계를 재정비함으로써,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수단들이 현장에서 더욱 원활히 작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남궁지희

서울시-건축공간연구원 서울한옥 4.0 붙임 세미나 ‘서울한옥, 또 다른 도전과 실험’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서울시는 4월 17일(수) 서울역사박물관 1층 아주개홀에서 ‘서울한옥 4.0 붙임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한옥, 또 다른 도전과 실험’을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표는 이경아 서울대 교수가 ‘2023년 서울시 한옥 전수조사의 성과와 의미’를 통해 서울시 한옥의 보존상태 및 안전성능 조사결과를 공유하였다. 두 번째 발표는 강성원 건축사사무소 강희재 대표가 ‘살아있는 공간, 삶은 담는 한옥’을 주제로, 2023 올해의 서울한옥 수상작인 ‘상촌재’를 비롯하여 은평 ‘일루와유’, 영월 ‘더 한옥 헤리티지하우스’ 등 다양한 한옥 사례를 소개하였다. 세 번째 발표는 김대균 착착스튜디오 대표의 ‘한옥의 어휘와 구법 되짚어 보기’로, 한옥 재료를 현대화한 사례, 자연 재료의 특징 등을 설명하였다. 끝으로 정태도 태도건축 대표는 ‘한옥, 나도 새로워지고 싶다’를 통해 전통건축과 현대건축이 결합한 사례를 들어 목조건축의 변화 필요성을 발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봉희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유식 서울시 한옥정책과장, 장옥연 온공간연구소 대표, 서승모 사무소효자동 대표, 조정구 구가도시건축사무소 대표, 신치후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서울시의 한옥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2024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대회 AURI 세션 ‘변화하는 우리의 삶과 생활권 계획’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4월 20일(토)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2024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AURI 세션을 맡아 ‘변화하는 우리의 삶과 생활권계획’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먼저 장민영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동네생활권’을 주제로 동네생활권 활용방안과 관리방안 등을 발표하였다. 두 번째로 강현미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초등학생의 놀이행태와 근린단위 놀이자원망 구축 방안’을 통해 놀이자원망의 개념과 특성, 공공 공간에서의 연계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변은주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원은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생활권계획 활용방안’을 주제로 인구 감소도시의 여건에 따른 생활권계획 활용방향을 제안하였다.

이어진 토론에는 성은영 건축공간연구원 공간문화본부장이 좌장을 맡고, 양재섭 도시정책연구소 도연재 대표, 홍성조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한영숙 싸이트플래닝 대표가 토론에 참여하여 생활권계획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2024년 제1회 녹색건축 미래포럼 ‘환경×건축:2030년을 향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방향’ 개최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건축공간연구원, 한국환경정책학회가 주관하는 ‘2024년 제1회 녹색건축 미래포럼’이 4월 23일(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른 건물부문 목표달성을 위하여 녹색건축 분야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및 지속가능한 정책을 발굴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포럼은 ‘환경×건축:2030년을 향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방향’이란 주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발맞춰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탄소중립 관련 분야별 주제발표를 구성하고, 수립방향을 모색하였다.

먼저 변병설 인하대 교수가 ‘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제로에너지건축 및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사례를 발표하였다. 이어 박진한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국가 및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현황 및 발전방향’을 통해 기후적응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관련 대책 및 대응방향을 발표하였다. 다음으로 민현준 잘그린건축연구소 소장이 ‘탄소중립 시대의 녹색건축’을 주제로 녹색건축물의 탄소감축 효과와 관련 주요기술 및 미래전망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박종훈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언’으로 발표를 마무리 지었다.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에는 최정석 한국환경정책학회 명예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자 전원이 토론에 참여하여 녹색건축 관련 주요 이슈를 논의하였다.

2024 도시커먼즈 포럼 '빈집'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국토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 사회센터,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춘천문화재단과 함께 6월 13일(목) 춘천 축제극장 몸짓에서 '2024 도시커먼즈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의 개회사 및 최연호 춘천문화재단 이사장의 환영사로 시작되었으며, 김계홍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이 기조연설을 진행하였다.

주제발표는 강승진 춘천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장의 '사라지는 빈집, 살아지는 동네', 장민영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빈집재생과 로컬커먼즈 : 공주 마을호텔과 남원 청년공간', 김자경 제주대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의 '현대총유론의 입장에서 바라본 유희공간 살리기 프로젝트 : 폐가살리기협동조합 vs 다자요' 발제가 각각 진행되었다.

종합토론은 강현수 중부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중준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승원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전임연구원, 윤주선 충남대 교수, 최명식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후 행사 2일차인 6월 14일(금)에는 사전신청자를 대상으로 모두의살롱 후평, 춘천 예술촌 등 춘천 공유공간 사례지를 둘러보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2024 AURI-광역지자체 건축자산 진흥 정책 심포지엄 ‘대구광역시 건축자산 진흥 정책 추진 현황과 발전 방향’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6월 4일(화)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2024 AURI-광역지자체 건축자산 진흥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구광역시 건축자산 진흥 정책의 추진 현황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는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건축자산 제도의 운영현황 등을 짚어보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제1부 주제발표에서는 김병환 대구광역시 건축과장의 ‘대구광역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향촌동 건축자산 진흥구역)’, 권종욱 영남대학교의 ‘제1차 대구광역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손은신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과 방보람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원의 ‘건축자산 제도 운영 현황 및 진흥구역의 지구단위계획 현황’ 발제가 차례로 진행되었다.

제2부 종합토론은 송석기 근대도시건축연구회장(군산대 교수)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보민 국토교통부 건축경관과 사무관, 신치후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조재모 경북대 교수가 참여하여 대구광역시 건축자산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2024 건축공간연구원- (사)한국여성건설인협회 공동세미나 ‘탄소중립을 위한 건축·도시분야의 ESG 전략’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사)한국여성건설인협회는 4월 26일(금)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탄소중립을 위한 건축·도시 분야의 ESG 전략’을 주제로, 박보경 (사)한국여성건설인협회 회장의 개회사 및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되었다.

첫 번째 발제는 박성남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이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건물부문 ESG 연계방안’을 주제로 건물부문 ESG 연계 필요성을 설명하며, 연계방향 및 관련 시범사업 등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발제는 송두삼 (사)대한설비공학회 차기회장(성균관대 교수)이 ‘건설산업, 왜 ESG인가?’를 통해 2050 탄소중립 등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제로에너지빌딩, 그린리모델링, ESG 경영사례 등 관련 사례와 정책을 제안하였다.

종합토론은 윤정아 (사)한국여성건설인협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박기숙 (사)한국여성건설인협회 ESG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아영 서울시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 재건축 예비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발제자 전원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2024 대한민국 국토대전 개최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2024 대한민국 국토대전'이 열린다. 이번 공모전은 '우리나라 국토와 도시공간의 아름다움과 품격 있게 가꾸어 온 창의적인 사례와 계획을 찾습니다'라는 구호 아래 기관, 개인,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 부문, 특별 부문, 경관행정 부문을 공모한다. 4월 3일(수)부터 5월 14일(화)까지 작품을 접수받았으며, 대통령상(1점)을 포함하여 총 18개 작품을 선정하여 오는 7월 18일(목)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일반 부문은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문화경관, 활력 있는 가로와 광장, 우수한 기능과 디자인의 주거·상업·업무단지, 문화발전과 공공성 증진에 기여한 건축, 국민생활편의증진 공공디자인, 국토디자인 향상에 기여한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한다. 특별 부문의 경우 빈 건축물 등을 활용한 창의공간을, 경관행정 부문의 경우 창의적·효율적 경관행정을 대상으로 한다.

이외에도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대전 홈페이지(www.lcd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축공간연구원-전라남도 영암군 MOU 체결

건축공간연구원과 전라남도 영암군은 영암군의 한옥문화 발전과 공공건축물 품격 향상을 위하여 5월 23일(목) 영암군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옥 등 지역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딩 전략 수립, 공공건축물 건립에 따른 품격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에 큰 의미를 가진다.

앞으로 두 기관은 ▲대한민국 한옥 문화 비엔날레 개최에 따른 한옥 관련 문화자원 개발 ▲영암군 한옥 문화자원 활용 도시브랜딩을 위한 정책 개발·지원 ▲공공건축물 건립에 따른 공간구성, 디자인 관련 정보 교류 및 제언 ▲한옥 등 건축자산 등록·보전 및 관리를 위한 자문 및 정보 제공 ▲건축자산의 유희공간 재생과 활용을 위한 연구·정책 교류를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건축공간연구원 이영범 원장은 “우리의 전통과 역사를 담고 있는 한옥을 널리 알리는 데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옥 등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현대적인 도시브랜딩 전략을 결합하여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